미국, 에너지 자급책 강화 압박...

캐나다-미국 송유관 건설 승인 촉구 ... 아시아 시장 확대에도 관심

미국 재계가 백악관에 에너지 자급을 강화하라고 압박했다.

재계를 대변하는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비즈니스 원탁회의>는 2월25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오일샌드에서 채취한 원유를 미국 텍사스 정유공장으로 수송하기 위해 길이 2736km의 송유관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백악관이 즉각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월 환경영향평가가 더 필요하다며 송유관의 캐나다 앨버타와 미국 네브래스카 구간 사업 승인을 보류했다. 해당 송유관은 미국 내 6개주를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이 조만간 프로젝트 실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2월17일 워싱턴에서 4만여명이 모여 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원탁회의는 미국이 에너지 자급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을 확대하고 규제도 완화하라고 백악관과 의회에 촉구하며, 미국 내륙과 연안의 석유, 천연가스 및 석탄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탁회의는 연방 정부가 주 정부 고유권한인 에너지 규제를 존중하라며 과도한 규제가 에너지 자급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2위 석유기업인 셰브론(Chevron)은 캐나다 연안에서 생산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아시아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셰브론 캐나다 법인 책임자가 2월25일 발표했다.

제프 레먼 사장은 이날 밴쿠버 회견에서 셰브론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방대한 가스 매장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셰브론과 셸(Royal Dutch Shell) 및 BG(British Gas) 그룹 등은 캐나다의 방대한 셰일(Shale) 원유와 가스를 아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세계 최대의 LNG 수입국인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기존 수입가격의 5분의1에 불과한 북미산 도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26>